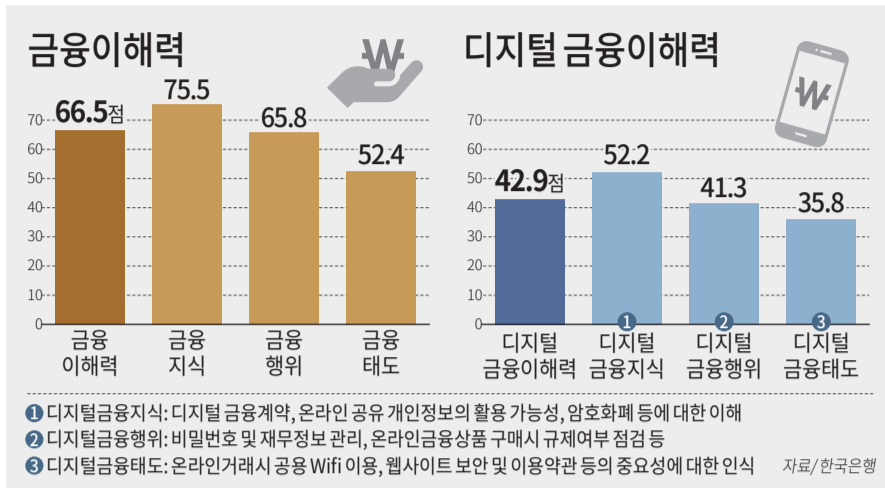


韓 금융이해력 66.5점... ‘복리이자 계산’ 이해도 낮아

한은, 2022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이자개념 93.8점, 복리이자 41.4점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 42.9점 불과 고소득 일수록 금융이해력 더 높아



금융이해력은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식·금융행위·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조사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8~79세 국민을 대상으로 총 2400개 구를 조사했다.

금융태도(52.4점)가 뒤를 이었다. 금융지식을 항목별로 보면 이자개념에 대한 이해는 93.8점으로 높았지만, 복리이자 계산에 대한 이해(41.4점)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은 66.5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는 42.9점으로 낮아, 온라인 거래 확대에도 재무 정보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① 디지털금융지식: 디지털 금융계약, 온라인 공유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 암호화폐 등에 대한 이해
② 디지털금융행위: 비밀번호 및 재무정보 관리, 온라인금융상품 구매시 규제여부 점검 등
③ 디지털금융태도: 온라인거래시 공용 Wifi 이용, 웹사이트 보안 및 이용약관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료/한국은행

97.8점으로 적극적인 반면 재무상황점검(55.7점), 장기재무목표설정(48점) 등 재무관리 활동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태도는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는 경우가 52.3점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소비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미래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미세하게 우세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는 일반 금융이해력의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는 42.9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지식이 52.2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행위 41.3점, 금융태도 35.8점 순이었다.

디지털 ▲금융지식은 디지털 금융계약, 개인정보의 활용, 암호화폐 등에 대한 이해 ▲금융행위는 비밀번호 및 재

무정보 관리 ▲금융태도는 온라인 거래 시 보안 및 약관등의 중요성 인식 등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를 정점으로 고연령으로 갈수록 이해력이 떨어졌다. 또 소득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48.8점으로 높았고, 중소득층은 44점, 저소득층은 39.4점으로 나타나 소득에 따른 금융이해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 등을 반영해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금융경제교육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합리적 의사결정에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기본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1면 'SK하이닉스 정기주총'서 계속

“정부 출산장려책, 혼인부부 → 출산아동 중심 전환해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출산보조금 등 효과 없으면 버리고 조기입학·학교잔류기간 단축으로 성인인식 연령대 20대로 낮춰야 출산 희망자에 의료지원 강화”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상근부회장. /무협

출산보조금 등 현금성 지원 정책 효과를 검증해 효과 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버리고, 출산장려책도 혼인부부 중심서 출산 아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2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 주제 ‘제34회 산업발전포럼’ 인사말에서 스페인의 저출산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우리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출산보조금 지급 등 물질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효과 없는 정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알베르트 아스테바 팔로스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교수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스페인의 경우 1950년대나 2000년대 현대 여성 모두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 비율은 90% 수준으로 동일했지만, 1980년대까지 90%의 여성이 25세부터 출산을 원했으나, 최근 출산을 희망하는 20대는 20%, 30대는

50%로 저조하다 40대가 되어야 90%로 높아졌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최초 출산 연령은 1985년 평균 25세였으나 현재는 32.5세로 높아졌고, 둘째 아동 출산 평균 연령은 45세가 됐고 함께 출산율도 약 30% 하락했다.

정 부회장은 “이 연구에 의하면 저출산 요인은 ‘어려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파트너 부재, 주거·소득·가사 부담 등 물리적 여건, 건강·연령 등으로 집약된다”며 “파트너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 조기입학과 학교 잔류기간 단축 등을 통한 성인 인식 연령대를 20대로 낮추고,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결혼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각종 출산장려책도 혼인 부부 중심에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아동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부회장은 “인력 부족, 나아가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국내 수출 산업 기반 약화의 핵심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며 “독작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과학적 원인 진단과 출산율 저하를 먼저 겪었던 유럽연합(EU) 등의 경험을 토대로 실효성 있고 예측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의 인구정책은 개별 회원국에서 다루고 있으나, 산업계의 인력 부족 대응은 유럽연합 집행위 차원에서 이뤄진다. 유럽연합은 노동시장에 불참하는 여성 인력과 노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외국인 활용을 위한 이민 확대 정책, 노동 인력 대체를 위한 자동화·정보화 확대와 기술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단기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장은 이날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집중 수행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처별 사업을 취

합한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응해 인구정책과 사업 간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는 기업 존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기업 참여를 제고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욱 인천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개선해야 하는데, 특히 기술 진보를 통해 노동 집약도를 낮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이후 우리 경제는 0%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 사회의 적응에 반드시 법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유효 노동 인력의 수요 예측 및 공급과 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들은 정책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다만, 정책의 체계적 운용, 권한과 예산 부여를 위해선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인텔서 인수 낸드사업부 ‘솔리다임’과 시너지 낙관

중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지속키로 했다. 미국에 지을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투자도 연구개발센터 투자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미국에 주로 있기 때문. 미중무역갈등과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도 최적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사업부인 솔리다임과의 시너지도 낙관했다. 이미 SSD 사업 확대 기반을 확대하고 후공정 역량으로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올해 통합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낸드사업 비중 30% 이상 메모리 다운사이클 끝나면 실적에 본격적 ‘긍정 영향’

실제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낸드 사업 비중을 처음으로 3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D램에 치중된 사업 구조로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상황, 낸드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eSSD도 낸드 사업에서 비중이 10% 중반에서 지난해 40% 초반까지 크게 성장하며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이번 메모리 ‘다운 사이클’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 관계자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도 빼놓지 않았다. 투자 효과 극대화에 더해 잉여현금흐름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위해 만든 ESG 전략 프레임워크 ‘PRISM’을 소개했다.

박 부회장은 “주주수가 1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하며 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술 리더십을 사업 성과로 연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한미·한일 협력 강화토대 충족”... 김성한 안보실장, 자진사퇴

“앞으로도尹정부 성공위해 최선”

교체설에 휩싸였던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자진 사퇴했다. 앞서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연쇄적으로 교체된 데 이어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인 김 실장까지 물러나게 됐다. 김 실장의 교체설은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잡음설

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본의 명의를 공지를 통해 “저는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1년 전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예정된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앞으로 대학에 복귀한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 성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생각에 잠겨있다. /뉴스1

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